



방사성 폐기물 안전 관리의 국제 규범 및 향후 방향

- 제2차 방사성폐기물안전협약 평가 회의를 중심으로 -

박 월 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성폐기물규제실 책임연구원



방사성폐기물안전협약(the Joint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the safety of the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이하 '폐기물안전협약'이라 한다.)의 제2차 체약국 평가 회의가 5월 15일부터 24일까지 오스트리아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폐기물안전협약은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있어 안전을 범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제

고, 유지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협약의 '자매 협약'의 성격을 가지는 국제 안전 규범이다.

우리나라는 과학기술부를 수석 대표로 하여 원자력안전기술원을 중심으로 유관 기관 전문가 대표단을 구성하여 체약국 회의에 참석, 우리나라의 방사성 폐기물 안전 분야의 정책, 주요 안전 관리 내용 등을 협약 조항별로 의무 사항을 발표하였다.

이번 폐기물안전협약 2차 평가회의는 프랑스의 안전 규제 기관인 DGSNR 국장 Mr. A. Lacoste 의장과, 우리나라의 은영수 박사(KINS 전 원장) 및 미국 에너지부 고준위 폐기물사업부 차관보인 Ms. P. Bubar 부의장 주재로, 전체 41개 체약국 및 협약 가입 예정인 중국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2차 체약국 회의는 5월 15일 오후부터 5월 19일까지 전체 5개 국가 그룹별로 나누어 체약국의 국가 보고서 발표로 본격 시작되었다.

이날 5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전체 체약국이 참여한 본회의에서 각 국가그룹별 보고자(Rapporteur)의 그룹 회의 결과 보고, 국가 그룹 회의와 병행 진행된 Open-ended Working Group 회의 결과 보고 및 제 2차 협약 회의 결과를 정리한 요약 보고서에 대한 체약국의 논의를 끝으로 폐회되었다. 참고로 미국은 회의 도중 자국이 추진하고 있는 GNEP(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약 회의에서는 협약의 의무 조항인 중저준위 폐기물, 사용후핵연료, 해체 및 방사성 동위원소 안전 등 여러 분야에 대해 참여 체약국 간에 심층적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협약체약국 회의의 주요 경과 사항

앞서 언급한 바 같이 5월 15일부터 제2차 폐기물안전협약 평가 회의의 개막 회의(Opening Plenary)는

〈표 1〉 방사성폐기물관리안전협약 서명·비준국 현황

(2006년 5월 현재)

구분	국 명	서명일	비준서등기탁일	비 고
1	Argentina*	1997. 12. 19	2000. 11. 14	* 1기 이상의 원자력발전소 운영 국가
2	Australia	1998. 11. 13	2003. 8. 5	
3	Austria	1998. 9. 17	2001. 6. 13	
4	Belarus	1999. 10. 13	2002. 11. 26	
5	Belgium*	1997. 12. 8	2002. 9. 5	
6	Brazil*	1997. 10. 31	2006. 2. 17	
7	Bulgaria*	1998. 9. 22	2000. 6. 21	
8	Canada*	1998. 5. 7	1998. 5. 7	
9	Croatia	1998. 4. 9	1999. 5. 10	
10	Czech Republic*	1997. 9. 30	1999. 3. 25	
11	Denmark	1998. 2. 9	1999. 9. 3	
12	Estonia	2001. 7. 18	2006. 2. 3	
13	Finland*	1997. 1. 5	2000. 2. 10	
14	France*	1997. 9. 29	2000. 4. 27	
15	Germany*	1997. 10. 1	1998. 10. 13	
16	Greece	1998. 2. 9	2000. 7. 18	
17	Hungary*	1997. 10. 29	1998. 6. 2	
18	Iceland		2006. 1. 27	
19	Indonesia	1997. 10. 6		
20	Ireland	1997. 10. 1	2001. 3. 20	
21	Italy	1998. 1. 26	2006. 2. 8	
22	Japan		2003. 8. 26	
23	Kazakstan*	1997. 9. 29		
24	Rep. of Korea*	1997. 9. 29	2002. 9. 16	
25	Latvia	2000. 3. 27	2000. 3. 27	
26	Lebanon	1997. 9. 30		
27	Lithuania*	1997. 9. 30	2004. 3. 16	
28	Luxemburg	1997. 10. 1	2001. 8. 21	
29	Morocco	1997. 9. 29	1999. 7. 23	
30	Netherlands*	1999. 3. 10	2000. 4. 26	
31	Norway	1997. 9. 29	1998. 1. 12	
32	Peru	1998. 6. 4		
33	Philippines	1998. 5. 10		
34	Poland	1997. 10. 1	2000. 5. 5	
35	Romania*	1997. 9. 30	1999. 9. 6	
36	Russia Federation*	1999. 1. 27	2006. 1. 19	
37	Slovakia*	1997. 9. 30	1998. 10. 6	
38	Slovenia*	1997. 9. 29	1999. 1. 25	
39	Spain*	1998. 6. 30	1999. 5. 11	
40	Sweden*	1997. 9. 29	1999. 7. 29	
41	Switzerland*	1997. 9. 29	2000. 4. 5	
42	Ukraine*	1997. 9. 29	2000. 7. 24	
43	United Kingdom*	1997. 9. 29	2001. 3. 12	
44	United States*	1997. 9. 29	2003. 4. 15	
45	Uruguay		2005. 12. 28	
46	EURATOM		2005. 10. 4	

총41개국 500여명의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표 1〉 ‘폐기물안전협약 체결국 현황’ 참조).

우리나라는 과학기술부 김승봉 원자력안전심의를관을 수석대표로 원자력안전기술원의 필자와 정승영 박사 등을 포함,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원자력연구소, 한전원자력연료(주), 한국전력기술(주)에서 총11명의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가하였다.

IAEA 원자력 안전 부문 사무차장인 Mr. Taniguchi는 개막 연설에서 현 협약 체결국의 수가 총41개국으로 늘어난 것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전하고, 금번 체결국 회의를 통하여 향후 좀 더 많은 국가가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 계획(Action Plan)을 도출하기를 희망하였다.

이어 Mr. A. Lacoste 협약 회의 의장은 현재 비준국인 단계인 브라질(협약 회의의 도중인 5월 18일부터 체결국 자격 보유)과 국내 비준 절차는 완료되었으나 아직 비준서를 IAEA에 기탁하지 않은 중국이 검토 회의에 참여하고자 정식 요청해 왔음을 알리고, 참여 여부에 대하여 체결국들의 가부를 물어 회의 참가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또한 OECD/NEA가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을 허용키로 결정하였다.

이어 개최된 국가 그룹 회의에서는 전체 41개 체결국은 5개 국가 그룹(〈표 2〉 ‘국가그룹별 참여국 및 발표 일정’ 참조)으로 나누어 5일간에

<표 2> 국가 그룹별 참여국 및 발표 일정

(2006. 5. 15~24)

	그룹 1	그룹 2	그룹 3	그룹 4	그룹 5
05.15(월)	제2차 협약 검토회의(본회의)				
	루마니아(1/2)	스웨덴(1/2)	불가리아(1/2)	헝가리(1/2)	노르웨이(1/2)
05.16(화)	네덜란드(2/3)	프랑스(1)	우크라이나(2/3)	폴란드(1/2)	캐나다(1)
	크로아티아(1/3)		라트비아(1/3)	체코(1/2)	
05.17(수)	미국(1)	리투아니아(1/2)	호주(1/2)	한국(3/4)	독일(1)
		슬로베니아(1/2)	아르헨(1/2)	체코(1/4)	
05.18(목)	벨지움(2/3)	오스트리아(1/2)	일본(1)	영국(1)	핀란드(1/2)
	벨라루스(1/3)	덴마크(1/2)			스위스(1/2)
05.19(금)	스페인(2/3)	슬로바키아(1/2)	EURATOM(1/2)	그리스(1/4)	모로코(1/3)
	이태리(1/3)	에스토니아(1/2)	아이슬란드(1/2)	러시아(3/4)	아일랜드(1/3) 우루과이(1/3)
05.22(월) ~ 05. 24(수)	협약 회의 본회의: 국가보고서 그룹별 보고 및 종합 정리				

절쳐 국가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협약국 발표에서의 주요 쟁점 사항인 고준위 폐기물 처분 전략 수립, 장 반감기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 해체 안전 및 기록 관리, 그리고 폐밀봉선 원 등의 안전과 관련 관리 체계의 확보 등에 대하여 집중 논의하였다.

우리나라는 제 4그룹에 소속되어, 5월 17일 오전부터 약 5시간에 걸쳐 우리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 현황 발표 및 우리나라 국가보고서에 대해 서면으로 제기된 전체 104개 질의에 대해 주제별로 정리하여 답변을 하였으며, 이어 제4그룹 국가(영국, 러시아, 헝가리, 체코 등)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독일, 아르헨티나 등 타그룹 국가 등도 참여하여 제기한 20여 개 보충 질의에 대해 답변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국가보고서에 대한 주요 질의 사항 및 타국의 관심 사항을 아래와 같이 4개 부분으로 정리하였다.

- 처분 부지 선정에서의 주민 참여 내용, 지역 사회 지원 내용 및 향후 안전성 확보 계획에 대해 영국, 아르헨티나, 독일 등의 질의
-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고준위 폐기물 정책 수립 방안 및 원자력 연구소 지하 실험 시설(KAERI-URF)에서 수행할 주요 연구 내용에 대해 네덜란드, 영국 등의 질의
- 원전을 포함한 주요 원자력 시설의 해체 계획 및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평가, 적립 및 관리 방안과 관련한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의 질의
- 국내 PWR/CANDU 원전 폐기

물 관리 시설의 주요 내용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체코, 헝가리, 아르헨티나의 질의가 있었으며, 특히 일본 등은 우리나라의 극저준위 폐기물 규제 해제(clearance) 사례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국가보고서 발표에 이어 정리 회의에서 제4그룹 의장인 핀란드의 Mr. Varjoranta는 지난 2003년 11월의 제1차 협약국 회의 이후 수행된 우리나라의 방사성 폐기물 안전 관리 수행 내용을 높게 평가하면서, 특히 방사성 폐기물 안전 관리에 있어 지역 주민의 참여에 의한 경주 처분 부지의 선정, 방사성 동위원소 폐기물을 포함한 방사성 폐기물의 통합 관리 시스템(KINS의 RASIS 및 WACID 체계)의 개발 및 IAEA 안전 기준을 근간으로 한 방사성 폐기물 규제 요건의 완비 등을 우리나라가 수행한 협약 의무 이행 내용 중 모범 사례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기존 처분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영국, 핀란드, 체코 등 참여국은 2009년에 운영할 예정인 경주 처분 시설 안전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현재 계획중인 처분 사업의 추진 일정이 매우 촉박하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처분 사업의 진행 계획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또한 현재 사업자 관리 형태로 되어있는 방사성 폐기물 사업의 총당금에 대해서 총당금의 적정성 평가 등에 있어서의 안전 규제 측면에서의 입장 개진 (Regulatory Oversight)

등이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향후 계속 검토 사항으로 평가하였다.

회의의 진행상 주요 일정, OEWG 일정 등을 결정한 후 일시 정회된 개막 회의(Opening Plenary)에 이어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최종 회의(Final Plenary)를 개최하여 국가 그룹 회의의 진행 내용에 대한 그룹 보고자의 요약 보고, OEWG 회의의 보고, 협약 요약 보고서 및 의장 보고서를 검토하였다.

이번 본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에 비해 국가 그룹 발표시 보고자 요약 내용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에서의 추가 질의가 없었던 것이 특이하였다.

Open-Ended Working Group(OEWG) 회의 결과

협약 평가 회의의 효과적 운영과 체약국의 확대를 위한 방안 논의를 위한 “Open-Ended Working Group”은 국가 그룹 회의와 별도로 5월 16-18일간(전체 3일) 운영하기로 하고, OEWG 회의 의장으로 협약 본회의 부의장인 미국의 Ms. Bubar를 선출하였다.

체약국 확대 방안의 하나로 협약 지역 회의(Regional Conference) 개최를 통한 협약 참여 권유와 관련하여 미국은 폐기물안전협약에 보다 많은 체약국의 참여를 추진하기 위하여 미국이 제공한 특별 예산(Extra-budgetary fund)을 IAEA 주관의 협약 참여를 위한 지역 회의

에 사용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이어 일부 참여국은 더 나아가 체약국 회의에 미(未)체약국을 옵서버 자격으로 초대하여 본 협약의 이점을 직접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협약에의 참여를 유도하자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특히 영국은 미체약국 중 원자력 활동이 활발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첫 번째 그룹의 국가의 경우는 국가별로 본 협약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하여 본 협약에의 참여를 IAEA가 주도로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협약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회의의 진행 절차의 개선에는 다수의 제안(예를 들면, 국가보고서 발표 자료의 사전 제공, 회의 배정 시간의 규정화 등)이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제안 내용을 차기 회의에는 반영하기로 하였다.

대부분의 OEWG 참가국은 현재 미체약국이 대부분 비원전국이나 소규모 원자력 국가이므로 국가보고서의 작성이 매우 어려운 작업임을 알리고 이의 대책마련을 제의하였다.

특히 새로 협약에 참여하는 체약국들의 경우에는 IAEA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전체 국가보고서를 다시 작성하기보다는 특정 분야를 강조하는 방법, 규제 기관에 의한 규제 감독, 운영자에 의한 규제 사항 준수 등을 중심으로 국가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IAEA 안전 요건(IAEA Safety Standards)의 국제 규범화와 관련, 협약회의의 조항별 안전 관리 내용의 이행 사항 평가에 사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참여 체약국은 IAEA 안전 요건이 협약 의무 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에는 효율적인 기준임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체약국이 국가보고서의 작성에는 동 안전 요건을 자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으로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IAEA 안전 기준을 의무 사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유럽 지역 국가와 자발적으로 적용하자는 미국의 입장으로 크게 나누어졌다.

GNEP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설명회 결과

본회의가 진행중인 5월 22일, 미국은 자국 에너지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에너지 공여국 및 수여국의 분리, 핵연료의 안정적인 공급 및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반환 등 GNEP 계획의 주요 내용을 체약국 대표단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설명회에는 약 50여명의 체약국 참가자가 참여하였으나, 주로 듣는 입장이었으며,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를 위한 반환시 예상되는 공여국 주민의 반대에 대한 해결, 일부 핵연료 주기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를 분리하는 기준 및 참여 방안



등에 대한 참여자의 질의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설명회의 분위기로 본다면 협약 회의에 참여한 체약국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GNEP 계획에 대해 향후 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미국 자체도 향후 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무부, 에너지부 및 국방부 등 관련 부처 간의 이행 방안에 대한 입장 조율 등에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었다.

일부 참여자의 비공식 의견에 따르면, GNEP 계획은 지난 9.11 사태 이후 국가 보안 및 방위에 많은 예산이 치중되는 바람에 자체 연구 및 사업 예산이 많이 삭감된 에너지부가 삭감된 예산의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관찰도 있는 등 아직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협약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Summary Report)

5월 15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국가 그룹 회의, OEWS회의, 본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논의 사항 중 국가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대한 각국의 전략과 관련 미국 및 핀란드 등의 국가 후행 핵연료 정책의 진전을 언급하였다.

협약 회의는 보다 많은 체약국이

국가 후행 핵주기 정책을 적절한 시기에 결정할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고준위 폐기물의 지층 처분 사업 수행의 어려움과 소규모 국가 중심의 지역 처분장(regional repository) 전략의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이러한 국가 전략의 추진에 주민의 동의를 통한 처분 부지 선정도 강조되었다. 특히 처분 사업과 같은 장기 국가 사업의 추진과 이행에 있어 관련 이해 당사자 참여(stakeholder involvement) 및 국민 이해(Public Acceptance)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였다.

특히 선진국뿐만 아니라, 관리를 위한 하부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개발 도상에 있는 체약국에서의 폐밀봉 선원(spent sealed source), 특히 무적선원(orphan source)의 안전 관리를 위한 소요 비용 확보, 이력관리 및 국경에서의 감시 체계 등 주요 관리 체계의 확보 내용에 대한 중요성 및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이 언급되었으며 이를 위한 국제적인 관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향후 예상되고 있는 주요 원자력 시설의 해체와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친 해체 추진 관련 기록 및 이력관리(Knowledge Management)가 강조되었는데, 특히 과거 사례로서 특히 구소련 지역인 러시아에서의 legacy 폐기물의 안전 관리를 위한 노력과 함께 대상 부지 복구 등이 현재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도 언급되었다.

이어 3차 체약국 회의의 진행을 위한 추진 사항으로 방사성폐기물 안전협약에 보다 많은 국가의 참여를 위해 IAEA 및 각 체약국은 더욱 노력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일부 개발 도상 체약국에 대해 필요시 재정 지원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차기 국가보고서 작성에 있어 체약국은 IAEA 안전 요건(IAEA Safety Standards)을 참고 요건으로 하되 그 적용은 자발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차기 협약 회의에는 각 체약국이 자국 내 방사성 폐기물 관리 안전을 위해 실제적으로 안전 증진을 위해 추진한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보고서 작성 및 발표 내용을 작성하기로 하였으며, 차기 평가 회의에서 주요 논의될 예상 내용은 과거 이력 불명 폐기물(long-lived waste)의 처분 안전 방안, 이해 당사자 참여 증진(stakeholder involvement) 방안, 폐밀봉 선원(spent sealed source)의 안전, 폐쇄 기록 관리(knowledge management) 등으로 현 2차 협약 회의 의장단 주도의 전체 위원회(General Committee) 회의에서 차기 체약국 회의시 중점적으로 논의할 사안을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다.

관찰 및 소감, 우리의 대응

이번 협약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을 위한 부지선정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정

된 것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하였으며, 안전규제 기관에 의한 IAEA 안전 기준을 근간으로 한 규제 기술 기준의 제정 및 개정이 완료된 것을 좋은 사례(Good Practices)로 언급되었다.

특히 지역 주민의 높은 동의하에 부지 선정이 마무리된 것에 대해 고준위 폐기물 처분 부지 뿐만 아니라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국에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질의에 참여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2009년에 경주 폐기물 처분 시설이 운영될 예정임을 감안 촉박한 사업자의 추진 계획과 건설 일정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브라질, 중국 및 러시아 등의 협약 회의 참여로 인해 세계 대부분의 주요 원자력 이용국(인도, 파키스탄 및 남아공 제외)이 폐기물안전협약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동아시아 지역 국가의 폐기물안전협약에서의 역할 증대 및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 폐기물 관리 안전 정보, 기술 및 경험에 대한 상호 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구 동구권 국가들로부터의 사용후핵연료 반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1000여개 이상의 방사성 폐기물 legacy 처분 부지 시설의 운영, 액체 방사성 폐기물 지층 처분 시설의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자국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 사례를 발표하였다.

이번 러시아의 국가보고서 발표 시에는 미국,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등을 포함한 많은 타국가 그룹 국가들도 참여하였으며, 회의 참여국들은 구소련 지역의 방대한 방사성 폐기물의 발생량, 관리 시설 및 당해 시설의 안전 관리 수준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 중에서도 많은 동구권 국가로부터 구소련 제공 원자력 시설의 사용후핵연료 반환 계획 및 이후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의 처리 계획 등에 질의를 받아 러시아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계획이 향후 구소련 블록 국가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체계의 중요한 현안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OEWG 회의 및 이어 본회의에서 계속 논의된 IAEA 규제 요건(Safety Standards)의 원자력안전협약 및 폐기물안전협약에서의 위상과 관련하여 향후 IAEA 안전 기준의 국제 규범화 및 IAEA 주관 협약에의 조항별 적용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협약에의 의무 적용까지는 미국이 회의 도중에 토로한 바 같이 IAEA 안전 기준의 도입시 예상되는 상이한 자국 안전 기준의 제정 절차, 즉 개발된 안전 기준에 대한 대중의 의견 수렴 기간 및 절차 명시 등에 따르는 IAEA 안전 기준의 자국 내 적용에 어려움을 강조함을 감안한다면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 부분의 국내 방사성 폐기물 안전 요건

이 IAEA의 규제 요건을 참고하여 제정하였으므로 국내 안전 규정 추가 제정 및 개정의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사회적 수용성의 증진 문제가 많은 체약국의 관심 사항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또한 방사성 폐기물 관리 사업에 있어 관련 정보의 적극적인 제공과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정책 결정 과정에 다양한 이해 당사자 참여 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함이 강조되었다.

이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과 같은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개입되는 장기 국가 사업의 경우 안전을 담당하는 규제 기관도 사업 초기부터 참여하여 안전에 관한 역할의 확대, 투명한 정보 공개 및 주민 수용성 제고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OECD/NEA의 최근 제안과 흐름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사회적 수용성의 확보는 2009년 5월 개최될 3차 회의에서도 중점 논의사항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2차 폐기물안전협약 체약국 회의는 차기 제 3차 회의 일정으로 2009년 5월 11일-22일까지 오스트리아 IAEA본부에서 개최하며, 국가보고서는 2008년 10월 11일까지 제출, 그리고 이어 협약 조직 회의를 2008년 10월 13-14일 양일간에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폐회되었다. ☉